

#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2.(금)

## □ 경남 기사

-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창녕군수 보선 후보 고발 (도민일보)
  - 상한 위반 혐의...회계책임자도
- 시행사 대표 잠적...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 빨간불 (경남신문)
  - 군, 대표 등 4명 경찰에 고발

홍 보 담 당 관 실

##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창녕군수 보선 후보 고발

### 상한 위반 혐의...회계책임자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녕군 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800만 원 넘게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선거비용 제한액 12억 2022만 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 174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초과 비용은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면서 “회계보고 관련 위반 혐의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김두천 기자 kdc87@

< 수사과 통보 >

# 시행사 대표 잠적...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 빨간불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추진 중인 호텔 건립공사 현장./합천군/

**군 관계자 “대표 소재 파악 안돼”**  
**550억원 대출 보증 선 합천군**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가능성**  
**군, 대표 등 4명 경찰에 고발**  
**도·감사원에 내부감사도 요청**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4성급 호텔을 짓겠다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잠적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비 550억원에 대해 대출 보증을 선 합천군은 최악의 경우 이미 대출된 수백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합천군은 1일 본청 3층 브리핑실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처방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합천군 박민좌 기획예산실장은 이날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호텔을 조성하겠다던 시행사 모브호텔엔리조트의 대표 A씨가 지난 4월 하순부터 잠적하고 시행사의 대출 후행조건 미이행 등 실시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해 1일자로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고 밝혔다.

실시협약 해지로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B증권에 지급 보증을 선 공사비 550억원 중 시행사가 대출받은 250억원 상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모브호텔엔리조트 대표 A씨는 지난 3월 자신들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대해 합천군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인하려 하자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브호텔엔리조트는 지난해 10월부터 호텔공사를 시작했고, 지난 3월 지하 전석으로 인한 토공 물량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공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위한 사업비 증액 요구를 했다.

합천군은 추가 대출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B증권에 시행사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구했고 지출 과정에서 사업공정에 비해 일부 과도한 지출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시행사는 직접 공사비가 아닌 설계비와 금융비, 집기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대출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천군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사대표인 A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지난 4월 19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 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합천군은 이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행사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주체들의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합천군은 내부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는지 경남도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합천군은 5월 31일 시행사 대표, 부사장, 이사 등 4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으며 대리금융기관인 B증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합천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선의에서 출발한 호텔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와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자본 약 59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7층, 객실 수 200여실 규모의 4성급 호텔 건립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준공해 합천군에 기부채납 한 후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합천군은 지난해 9월 26일 군 대표 관광지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4성급 호텔을 신축하는 착공 기념식도 가졌다. 합천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면서 ‘머물고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고급 호텔 건립에 나섰으나 사업이 무산위기에 빠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호텔이 들어설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청와대 축소 세트장을 포함해 다양한 영화 세트장이 마련돼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합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 수사과 통보 >



# 20대 경찰 보기 힘든 도내 지구대·파출소

10명 중 4.6명 이상이 50~60대  
근무 희망 많지만 자리가 부족  
신임 기동대 의무복무 영향도  
‘연령대 장점 조화’ 큰 숙제로

경남지역 경찰관 연령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
(자료: 경남경찰청)			
전체 7326명(%)	3006	419	
20대 698 9.5	10.8	18.1	
30대 2259 30.9	25.1	54.5	
40대 1629 22.2	17.6	21.2	
50대 2591 35.4	43.5	6.2	
60세 149 2.0	3.0	-	

지구대와 파출소가 늙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경찰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임 경찰관은 기동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연령대 불균형 현상’이 뚜렷해지는 흐름인데, 치안 현장에서 젊음이 주는 기동성과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경남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5월 기준 50~59세 경찰관 비율이 35.4%(2591명)로 가장 많다. 30~39세 30.9%(2259명), 40~49세 22.2%(1629명), 20~29세 9.5%(698명), 60세 2%(149명) 순이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 연령대도 50~59세가 43.5%(1306명)로 가장 많다. 60세도 3%(91명)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10명 가운데 4.6명이 50대 이상인 셈이다.

◇경찰 연령대 불균형=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은 현장을 가장 먼저 접한다. 치안 수요가 적어 하루 한 번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강력 범죄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지구대와 파출소다.

50대 경찰관 ㄱ 씨는 “젊은 경찰관이 있으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근무 경력이 많은 선임도 함께하면 노련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순찰팀장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2인 1조 편성을 하려고 해도 젊은 경찰

관이 부족해 50대 경찰관끼리 순찰을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구대·파출소가 늙어가는 이유는 뭘까. 젊은 경찰관이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꺼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서보다 업무 구조가 단순하고 근무 일수도 적어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선호하는 편이다. 20대 경찰관 ㄴ 씨는 “치안 수요가 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면 자기 계발이나 승진 준비를 하기 좋다”며 “휴일근무수당, 출동수당 등 신청할 수 있는 수당도 많아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동료도 봤다”고 밝혔다.

인사철이면 인사이동 대상자가 지역 경찰 담당에게 근무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치안 수요가 적은 파출소는 인기가 많다. 결과적으로 지구대·파출소로 갈 젊은 경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받을 자리가 없는 셈이다.

올해부터 경남경찰청에서 의무경찰 복무 제도가 폐지된 탓도 있다. 대신 신임 경찰관은 1년 이상 기동대 근무를 해야 한다. 기동대는 시위와 진압, 방범순찰, 교통정리, 실종자 수색 등을 맡는다.

경남경찰청 기동대는 모두 4개로 20, 30대 경찰관이 많다. 30~39세가 54.5%(228명)로 가장 많으며, 40~49세 21.2%

(89명), 20~29세 18.1%(76명), 50~59세 6.2%(26명), 60세는 없다.

40대 경찰관 ㄷ 씨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동대를 하기에 벅차서 젊은 경찰관들이 할 수밖에 없다”며 “연령대 조화가 큰 숙제이기는 한데 강제로 안 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연령대 조화 이루어면?=경찰 연령대 조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앞으로 퇴직자가 생기면 그만큼 신규 인력이 들어와 인력 순환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경남경찰청 경무과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경찰관을 많이 선발했는데 당시 채용된 이들이 퇴직 연령을 앞두고 있다”며 “경찰관 정원이 정해져 있기에 퇴직자가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젊은 경찰관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은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시기다. 정부는 당시 부족한 치안 수요를 메우려고 경찰관 채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와 다르게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성이 크다 보니 퇴직도 안 하면서 조직이 노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치안 서비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경찰관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당장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인위적인 인력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며 “특정 시기에 명예퇴직 제도를 이용하면서 신규 채용을 확대해서 인력 순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all@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재난대응기관장들이 재난안전 사령탑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경남도

# 24시간 종합 재난대응 사령탑 도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시작

## 도내 CCTV 영상 실시간 확인 응급의료상황도 효율성 확보

경남도는 도 단위 중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 사령탑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전파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축됐다. 도는 기관과 부서별로 운영하는 영상정보를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7억 원을 들였다.

생활치안을 위해 18개 시군에 설치된 지능형 CCTV 3만 8000여 대, 재해위험지역 CCTV 487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황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전문인력 4팀 12명(도 8명, 소방 4명)이 24시간 근무하며 재난 관제를 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재난대응기관으로 전파한다. 또한 응급의료 사령탑과 연계를 강화해 병상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1일 재난안전상황실 개소식과 시연 행사에 박완수 도지사, 최학범 도의회 부의장, 박해영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제39보병사단장,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남소방본부장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도, 소방본부, 경찰청 모두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안전에 관련된 투자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우선돼야 한다”며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도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 경비과 통보 >

##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경제자유구역서 해제를”

2021년 받은 부지 경자청 계획 포함  
조합 “도지사가 정부에 제외 요청을”  
도 “부지 제외 관련 실질적 권한 없어”

부산신항으로 인해 일터를 잃은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경남도에 생계 대책 보상으로 받은 웅동 1지구 일부 부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진해구의 제덕, 수도, 연도, 남문 4개 어촌계는 지난 1995년 3월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 결정되면서 어업권이 소멸됐다. 이후 이에 대한 보상이 논의된 결과 2021년 11월 이들 어민은 창원시 소유 웅동 1지구의 일부 부지인 11만2400㎡를 각각 생계 대책용으로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청 자유구역 실시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 조합은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자청)은사업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웅동 1지구 보상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시행자가 재지정되면 어민들이 생계 대책용으로 받은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아무런 보상 없이 기다리던 어민들은 경자청의 토지 수용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련법에는 도지사가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도지사는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생계 대책 부지로 받은 토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합이 요구하는 ‘부지 제외’와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 위임이 경자청장

에게 돼 있는 사항”이라며 “도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경자청 관계자는 “변경 신청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한이 있어 승인될지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초기 계획대로 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부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에 맞게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구해서 그에 맞는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계획을 통해 수용되거나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 정보과 통보 >



慶南日報

2023년 6월 2일 금요일 010면 사람



#### 경남자치경찰위원회, 합천경찰서 방문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합천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 박종난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유공 경찰관과 협력단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표창장과 감사장 수여했으며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홍기자

< 참고기사 >



# 장애아동 학대한 진주 어린이집 돌연 폐원 통보한 후 원장 잠적

재원 아동 전원조치 마무리 전  
등원 중지 요구에 학부모 황당  
시 “혼란 수습·엄중 조치할 것”

아동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진주의 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다른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냈던 학부모들은 일방적인 등원 중단 통보에 난감해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엄벌 여론이 들끓는 중에 벌어진 무책임한 폐원에 아동학대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이 이날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내고 나서 오후 1시쯤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게 대한 면직 보고를 했다. 학부모들에게는 6월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등원 중단 통보에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진주시는 학부모들에게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 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 아동 조치와 보육 교직원 채용 계획을 6월 1일까지 마련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1일 오전 어린이집을 방문해 앞으로 대응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였고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원에 반대하거나 전원할 곳을 찾지 못해 해당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은 19명이다. 그중 종일반 7명은 관내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가정 보육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 12명은 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 지원 서비스 센터 이용을 안내받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전원과 관련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어린이집 운영법인 측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학대사건을 규탄하거나 자성하는 회견과 성명이 잇따랐다. 1일 오전 11시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진주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진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 등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장애인 인권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최악의 파렴치 장애아동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무책임한 운영 법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회복 지원, 재발 방지대책 이행,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등 제도적 예방체계 구축 등을 시에 요구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장애아동을 학대한 푸른샘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하고 아동보육과 간부직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현장을 재점검해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보육의 힘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가 점검 기회를 가져 보육 교직원이 영유아를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기자 kimjh@

< 참고기사 >

## “검찰,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 수사·처벌하라”

동물권단체 ‘케어’ 진주시청서 기자회견  
“우발적 범죄 아냐...엄중하게 처벌” 촉구

20대 남성이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동물권단체가 나서 강력 수사·처벌을 촉구했다.  
(경남일보 1일자 4면 보도)

그것을 촬영해 공개했으며 불특정 다수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즐기며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케어는 “2019년부터 죽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죽임을 당한 고양이의 숫자는 3마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감전 살해를 위한 전기 세트장까지 설치하

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숨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케어는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한 자는 단지 동물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며 동물의 고통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겼고

고 고통을 촬영한 학대자의 행위는 우발적 범죄들이 아니기에 법정 최고형으로 강력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은 압수수색·구속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케어는 1만 3600여 명이 동참 서명한 ‘끔찍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감전사시킨 학대범 엄벌 탄원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정웅교기자 kyo1@gnews.co.kr

## 康南日報

2023년 6월 2일 금요일 004면 사회

### 노모 상습 폭행 아들 항소심도 실형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 목을 비틀고 흥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연남스



## “교감 승진 실적 쌓으려...” 출품영상 돈 주고 제작 50대 교사 집행유예 1년

교감 승진 실적을 쌓으려 업체에 돈을 주고 제작한 영상을 자신이 만든 것으로 속여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연구대회에 출품해 입상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운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50대) 씨와 영상 제작자 B(40대)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에 B 씨에게 촬영비 편집비 등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불해 제작한 영상을 마치 자신

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한 혐의로, B 씨는 이 영상을 제작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회 수상 이력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연구 실적에 포함돼, A 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 외국인 마약 범죄 강력 대응해야

외국인 마약사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을 들어 남해안 일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외국인 마약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 외국인 마약사범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5명이 해경에 붙잡힌 것을 비롯해 거제와 창원외 노래주점에서 마약행각을 벌이던 외국인이 검거되는 등 도내 외국인 마약사범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전국 마약류 범죄 단속 통계만 봐도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경남경찰의 마약사범 통계에서도 외국인 마약범죄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달 24일 기준 올해 마약사범 232명을 검거했더니 이 중 외국인은 13.8% (32명)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전체 마약사범 검거 대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다. 더욱이 이들의 마약 유통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

각하다. 여기에다 갈수록 집단화되고 조직적 범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가 자칫 내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경우 도내 전역에 마약의 암운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사실 도내 외국인 주점에서 주말마다 마약류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여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아직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마약류 유통과 투약은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다. 환각성분과 강력한 중독으로 인해 한번 빠지면 쉽게 떨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남해안 일대와 도내 전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유사 마약 유통조직이 더 있을 개연성이 높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추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니 이번 기회에 철저한 유통망 차단과 마약류 확산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기 바란다.

## 아동학대 엄중한 처벌이 재발 막는다

장애아동에게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래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면 분노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보낼 곳을 잃은 부모들이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하소연하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진주시는 학부모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전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피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16일까지 영상에서 확인된 학대 건수는 방조와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는다. 가장 학대를 많이 당한 아이는 250건에 이르고, 학대 수위 역시 굉장히 높다. 학대당한 이유도 어이가 없다. '교실에서 나가려고 해서', '낮잠을 안 자서',

'밥을 흘려서' 등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학대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진주시가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극적인 조치보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피해 어린이들과 학부모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명백하게 학대를 자행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낼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보내는 상황이 빚어졌다.

진주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두 번 힘들게 하는 일은 없도록 했어야 했다. 법에 정해진 대로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다.

진주시는 4년 연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었다. 진주시는 사안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마땅한 조치와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더 이상 진주시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의 날씨

**아침까지 비... 남해안 일부 시간당 20mm**  
2일 부울경 아침까지 비가 오겠다. 일부 경남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2023년 6월 2일 (음 4월 14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30 자외선 30 피부 40 냉 방 70 빨 래 20

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  
맑은 후 구름많음 구름많은 후 맑음  
한때 비 천둥번개 호리고 비 호리고 비눈  
소나기

해돋이/해질 05:10 19:33 달돋이/달질 17:39 03:29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6:46 19:25	00:43 12:40
인천	03:18 15:31	09:43 21:49
포항	04:43 13:51	08:14 21:22
통영	07:13 19:59	01:17 13:13

바다날씨

알바다	풍향	풍속	파고
남해서부	북동-동	8-12	1~2
남해동부	남서-서	3-7	0.5~1.5
동해남부	남서-서	5-9	0.5~1
동해중부	북서-북	4-7	0.5~1
서해중부	남서-서	2-6	0.5~0.5
서해남부	북-북동	7-11	0.5~1.5

주간날씨

	3(土)	4(日)	5(月)
부산	☀ 18-25	☁ 18-27	☁ 20-26
울산	☀ 16-25	☁ 16-28	☁ 17-28
진주	☀ 17-28	☁ 15-29	☁ 16-28
김해	☀ 17-27	☁ 17-29	☁ 19-29
창원	☀ 18-27	☁ 17-29	☁ 18-28
통영	☀ 18-24	☁ 18-25	☁ 18-25
대구	☀ 17-29	☁ 17-30	☁ 18-29
세종	☀ 17-28	☁ 15-28	☁ 16-28
서울	☀ 18-29	☁ 18-28	☀ 17-27
제주	☀ 18-24	☁ 19-26	☁ 19-24

## 사라진 35억원어치 의령농협 양파

신임 조합장 업무 인수 과정에서 발견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서 감사 진행  
“실제 재고와 서류상 재고 불일치 확인”

의령농협이 지난해 사들였던 60억원  
가량의 양파 중 35억원 상당이 서류상

으로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돼 경남농  
협의 감사를 받았다.

1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등에 따르  
면 경남농협 검사국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의령농협에 대한 감사를 벌  
여 35억원 상당의 양파 재고가 없는 것  
을 확인했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이

후 취임한 신임 의령농협 조합장이 업  
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파 재고가 맞  
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농협  
중앙회 경남본부 경남검사국에 감사  
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의령농협은 지난해 60억원가량의  
양파를 매입해 이중 25억원가량은 판  
매 등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이 경우  
나머지 35억원어치 양파 재고가 있어  
야 하지만 실제 양파 재고와 서류상 재  
고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실제 양파와 서류상 재고  
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양  
파 일부는 썩어서 손실이 발생한 것도  
있고, 팔고 난 뒤 돈을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 부분도 존재해 있다”면서 “농협  
중앙회에 보고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달가량 걸릴 것 같  
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농협은 최근 관련 책임자  
3명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유진 기자

< 수사과 통보 >

## 경남도민일보

2023년 6월 2일 금요일 015면 사람들



### 김해서부경찰서 다문화가정에 생필품 전달

김해서부경찰서가 지난달 31일 2층 회의실에서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 ‘생필품 보따리’를 전달  
했다. 생필품 보따리 전달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  
행했다. 손병철 경남경찰청외사자문협의회 부회장(대  
동하이텍 대표)이 지원해오고 있다. /이수경 기자

< 참고기사 >